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2018년 08월 30일

| 금주의 이슈 |

- I. 對국민 경제인식 조사 · 분석 결과 / 3
- II.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배경, 평가, 전망 / 11
- III. 유튜브의 국내 통신망사용 문제점 및 개선안 / 17
- IV. 외국인 근로자 130만 시대, 현황과 대책 / 23

금주의 이슈

2018. August 제 17 호

금주(8월 다섯째 주)는 경제, 안보, 통신, 고용 분야에 관한 4편의 이슈를 다루었음. 제1편에서는 경제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文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했으며, 제2편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관련 배경 및 평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음. 이어 제3편에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통신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와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며, 제4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 체류자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방안을 모색하였음

제1편 \ 對국민 경제인식 조사 · 분석 결과

-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김영현 연구원

한국 경제 위기상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진단해보기 위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43명을 대상으로 8월 22~23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文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과, 현재 및 미래 살림살이에 대한 매우 비관적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음. 더불어서,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탈원전 등의 정책 용어가 정치적 이념화로 변질되어 인식되고 있는 점, 보수는 물론 중도성향의 국민들도 文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매우 높음을 확인한 점이 금번 조사의 주된 시사점임

제2편 \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배경, 평가, 전망

- 이윤식 연구위원

8.24(土)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하며, 관련 이유를 “중국이 과거처럼 비핵화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국 책임론’을 부각. 美 의회와 전문가들 역시 비핵화 의도가 없는 북한에 대해 최대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면,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 그러나 일각에선 8.24(土) 오전 김영철이 폼페이오에게 전달한 친서에 ‘평화협정 未추진시 비핵화 협상 무산 및 핵미사일 실험 재개’란 경고가 직접적 배경이 됐다는 분석. 이에 당분간 북한은 對美 비난을 자제하며 상황을 관망할 것으로 보이고, 9.9절을 전후한 시진핑의 방북과 3차 남북 정상회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

제3편 \ 유튜브의 국내 통신망사용 문제점 및 개선안

- 김신의 연구원

현재 국내 인터넷 통신망 사용량에서 유튜브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은 통신망 사용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연간 수백억대를 지불하는 국내 IT기업과의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유튜브의 부가통신사업자 지정, 과세기준 마련위한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 등이 시급함

제4편 \ 외국인 근로자 130만 시대, 현황과 대책

- 김영현 연구원,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130만명 시대에 돌입했으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불법체류자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외국인 불법 체류자 급증 원인은 무사증·관광비자 등을 통한 취업형 불법 체류자 증가, 고용허가제 폐해, 외국인 고용을 선호하는 사업주들의 행태 등으로 보여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농어업 및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비율이 늘면서 외화 유출 등 부정적 효과가 큰 상황.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내국인 근로자 역차별 해소 위한 불법 체류 단속 강화,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함

I . 對국민 경제인식 조사 분석 결과

작성: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 02-6288-0531
김영현 연구원 ☎ 02-6288-0532

한국 경제 위기상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진단해보기 위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43명을 대상으로 8월 22~23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文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과, 현재 및 미래 살림살이에 대한 매우 비관적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음. 더불어서,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탈원전 등의 정책 용어가 정치적 이념화로 변질되어 인식되고 있는 점, 보수는 물론 중도성향의 국민들도 文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매우 높음을 확인한 점이 금번 조사의 주된 시사점임

1 조사 목적

- ◆ 최근, 산업·민생 현장의 목소리뿐 아니라 각종 경제통계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우리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 인식 파악
 - ▶ 문재인 정부 2년차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 평가 및 향후 전망
 - ▶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최저임금제 등 구체적 경제정책 평가
- ◆ 지역·연령·정치이념성향·직업 등에 따른 국민인식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對국민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 분석 주요 결과

1 국민 살림살이 평가·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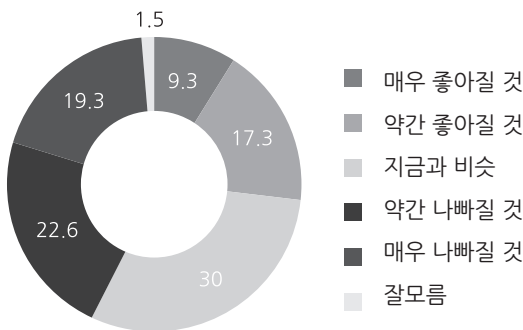
-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신의 살림살이 형편이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국민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향후에도 나빠질 것으로 전망
 - ▶ [국민 살림살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민 살림살이 평가
 - 좋아졌음 20.8%, 비슷 33.3%, 나빠졌음 43.7%, 잘모름 2.2%

▶ [살림살이 전망] 향후 1년 국민의 살림살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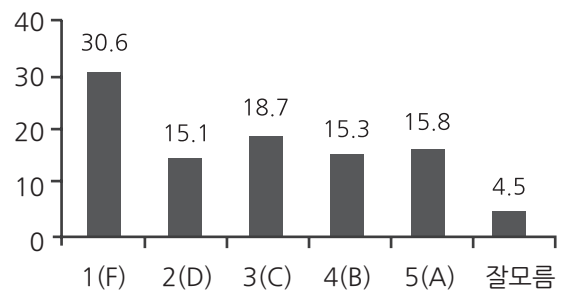
- 좋아질 것 26.6%, 비슷 30.0%, 나빠질 것 41.9%, 잘모름 1.5%
- ※ 한국갤럽: 좋아질 것 17%, 비슷 32%, 나빠질 것 44%, 잘모름 7%
(8.7~9, 1,003명, 유선15%+무선85%, 95% ± 3.1%P)

▶ 국민들은 ‘불안한 일자리’(23.3%)를 가장 큰 고민거리로 여기고 있으며, 생계비 부담(22.4%), 주택·주거(16.0%), 건강(15.9%), 교육·육아(10.7%) 순

향후1년 살림살이 전망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종합평가



2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

◆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온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점수는 낙제(F)가 지배적이며, 중도 성향의 국민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높음¹⁾

▶ [경제정책 종합점수] 문재인정부 15개월간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 부정적 평가(45.7%) 비율이 긍정적 평가(31.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 아주잘함 15.8%, 잘함 15.3%, 보통 18.7%, 못함 15.1%, 아주못함 30.6%

1) 5점 척도를 아주잘함(A), 잘함(B), 보통(C), 못함(D), 아주못함(F)으로 표기.

		잘함(%)	못함(%)
이념성향별	보수(34.6%)	23.6	58.6
	중도(24.3%)	20.8	44.4
	진보(41.1%)	64.4	25.1
지역별(부산울산경남)		38.7	49.9
직업별	자영업	40.9	45.7
	학생(19세이상)	38.2	50.2

-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효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28.3%인 반면, (부분적)보완·수정·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66.7%로 집계
 - ▶ [소득주도성장]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평가
 - 지속적 추진 28.3%, 부분적 보완 19.9%, 정책 방향 수정 25.8%, 폐기 21.0%, 잘모름 5.0%
 - ▶ 다만, ‘부분적 보완’까지 긍정적인 인식으로 분류한다면 기본방향 유지(48.2%)와 수정·폐지(46.8%)가 비슷한 수준
 - ※ 리얼미터: 기본방향 유지 55.9%, 전면폐지 33.4%, 잘모름 10.7%
(8.22, 500명, 유선20%+무선80%, 95% ± 4.4%P)

-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그 주된 요인으로 인식. 심각한 문제는, 향후의 고용상황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임
 - ▶ [일자리]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
 - 잘하고 있음 27.7%, 보통 21.2%, 잘못하고 있음 48.1%
 - 잘못된 이유로는, 최저임금 대폭인상(39.0%)을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이어서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확대 정책(22.1%), (청년)실업률증가(20.2%) 순
 - 향후 1년의 고용상황에 관해서는 ‘나빠질 것(48.4%)’이 ‘좋아질 것(26.1%)’이라는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높음

-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소폭 우세.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부분)보완·재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
 - ▶ [최저임금]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평가

- 금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전년도 대비 16.4%인상 7,530원)에 대해 잘했음 42.5%, 보통 12.7%, 잘못했음 42.7%

		잘했음(%)	잘못했음(%)
이념성향별	보수(34.6%)	31.3	53.4
	중도(24.3%)	32.9	50.4
	진보(41.1%)	57.3	29.4
지역별(부산울산경남)		29.2	55.9
직업별	자영업	41.6	49.7
	학생(19세이상)	34.5	41.7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10.9%, 8,350원) 결정에 대해서는, “보완·재논의해야”(72.0%)²⁾ 비율이 “전면시행해야”(24.1%)보다 훨씬 높음

◆ 공무원수 증원,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개편 등 최근의 국가 재정투입 증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상당히 우세하며, 무엇보다 국가 재정고갈을 크게 염려하고 있음

▶ [재정정책]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대한 평가

- 잘하고 있음 34.4%, 보통 15.2%, 잘못하고 있음 47.0%
- 부정적평가의 주된 이유는, 재정고갈 우려(44.1%)이며, 이어서 국가경쟁력 약화(24.3%), 공공부문 비대화(14.7%), 민간 경제 활력 저하(13.3%) 순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미미하게나마 우세하였으나, 정치이념·성향에 따라 ‘보수·중도=불만족, 진보=만족’으로 대비

▶ [탈원전] 탈원전 에너지정책 평가

- 만족 40.9%, 보통 13.1%, 불만족 41.5%

2) 일부보완, 업종·지역별 적용유예, 재논의 등을 포함

		만족(%)	불만족(%)
이념성향별	보수(34.6%)	29.9	53.3
	중도(24.3%)	31.9	48.0
	진보(41.1%)	55.5	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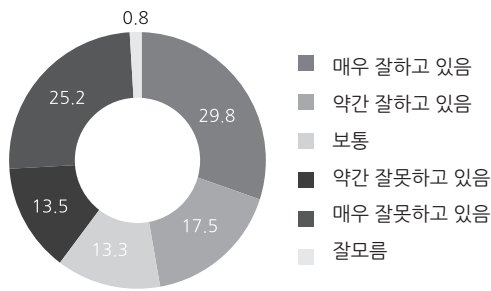
-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이념에 치우친 정책”(36.5%)이 전력공급 불안전(20.3%), 전기료인상·가계부담증가(15.6%), 일자리감소, 원전수출악영향 등의 이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3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 ◆ 국민들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득양극화(46.0%)를 꼽았으며, 이어서 ‘저출산·인구감소’(16.2%), 낮은 성장률(12.2%), 사회적자본 부족(10.3%) 순
- ◆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자리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노동시장구조 개혁을 주된 개혁분야로 인식
 - ▶ [정책우선순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 일자리확충(27.7%), 공정시장질서확립(22.6%), 기업투자확대(19.9%), 가계소득확충(13.6%) 순
 - ▶ [경제개혁분야] 지속·안정적 성장을 위한 최우선 경제개혁 분야
 - 노동시장구조개혁(21.9%), 경제전반규제개혁(19.7%), 복지제도개혁(19.3%)

4 국정운영 평가

-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비슷한 시점에 실시한 복수의 전문조사기관 여론조사에 비해 긍정적 여론이 8% 이상 낮게 나타남
 - 정치적 이념·성향별 대비가 극명하지만, 중도성향의 국민 역시 부정적 여론이 우세
 - 직업별로는, 자영업, 학생, 실업자의 경우 부정적 여론이 매우 높음
- ▶ [국정운영]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 잘하고 있음 47.3%, 보통 13.3%, 잘못하고 있음 38.7%, 잘모름 0.8%



		잘하고 있음(%)	잘못하고 있음(%)
이념성향별	보수(34.6%)	34.7	50.7
	중도(24.3%)	36.4	44.4
	진보(41.1%)	64.4	25.1
지역별(부산울산경남)		38.7	49.9
직업별	자영업	40.9	45.7
	학생	38.2	50.2
	무직·실직	38.1	45.9

※ 리얼미터: 긍정적 56.3%, 부정적 38.4% (8.13~17, 2,007명, 유선20%+무선80%, 95% ± 2.2%P)

※ 한국갤럽: 긍정적 56%, 부정적 33% (8.21~23, 1,001명, 유선15%+무선85%, 95% ± 3.1%P)

3 주요 시사점

- ◆ 금번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아래서의 불안한 일자리와 생계비 부담 등 국민들의 절망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음
 - ▶ 현재 뿐 아니라 미래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매우 비관적인 여론 확인
- ◆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들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를 再확인
 - ▶ 경제정책 종합점수 뿐 아니라, 일자리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대표적 정책들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인식 우세
 - ▶ 다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trade mark인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및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정치이념성향과 일맥상통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탈원전 등의 정책용어가 정치적 이념화로 변질되어 인식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 응답자 중 보수:중도:진보 비율이 34.6對24.3對41.1로, 진보성향의 응답비율이 보수비율에 비해 높았음을 감안할 필요
 - ▶ 보수는 물론 ‘중도’ 성향의 국민들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가 긍정적인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음
 - 직업별로는 자영업, 학생, 실업자의 부정적 인식 비율이 매우 높음
-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결과(긍정 47.3%, 부정 38.7%)에서는 비슷한 시점에 수행된 리얼미터(56.3%, 38.4%)와 한국갤럽(56%, 33%) 조사 대비 보다 더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읽을 수 있음

▣ 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18년 8월 22일(수) 11:00~22:00 , 8월 23일(목) 11:00~16:00

◆ 모집단 및 표본 크기

▶ 모집단 :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여

▶ 표본크기 : 2,043명

※ 응답률 : 1.90% (총 107,788명 연결 중 2,043명 응답)

◆ 조사방법 : ARS 전화조사

▶ 휴대전화 RDD 1,419명 (70%), 유선전화 RDD 0,624명 (30%)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2.17\%P$ (최대허용 표집오차)

※ 實査는 여론조사실, 조사기획·통계결과분석은 경제정책실에서 담당

II .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배경, 평가, 전망

작성: 이윤식 연구위원 ☎02-6288-0548

8.24(土)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하며, 관련 이유를 “중국이 과거처럼 비핵화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국 책임론’을 부각. 美 의회와 전문가들 역시 비핵화 의도가 없는 북한에 대해 최대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면,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 그러나 일각에선 8.24(土) 오전 김영철이 폼페이오에게 전달한 친서에 ‘평화협정 未추진시 비핵화 협상 무산 및 핵미사일 실험 재개’란 경고가 방북 취소의 직접적 배경이 됐다는 분석. 이에 당분간 북한은 對美 비난을 자제하며 상황을 관망할 것으로 보이고, 9.9절을 전후한 시진핑의 방북과 3차 남북 정상회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II .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배경, 평가, 전망

1 방북 취소 배경

- ◆ 현지시간 8.24(土) 트럼프 美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취소
 - ▶ 그 이유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충분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또한 (對中 무역 관련 미국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중국이 과거처럼 비핵화 절차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힘
 - ▶ 이와 함께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일단락되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재개될 것”이란 여지를 남기며, 이번 방북 취소 배경과 비핵화 협상 부진의 원인으로 ‘중국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부각시키는 분위기
- ◆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발표(8.23)가 있는 지 단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상황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더욱 집중
 - ▶ 8.27(月)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폼페이오 방북 취소’ 트윗 발표 직전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친서를 전달했고, 그 내용이 직접적 도화선이 되었다고 보도
 - ▶ 김영철의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트럼프와 폼페이오가 방북을 취소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적대성’을 가진 내용이 포함됐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
 - ※ 8.28(火) CNN은 친서에 “중전선언과 평화협정 未추진시 비핵화 협상 무산 및 핵·미사일 실험 재개를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

- ▶ 일각에선 현 사태의 수습을 위해 김영철이 워싱턴으로 급파되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음
- ◆ 종합할 때, 이번 트럼프의 방북 취소 결정은 對北, 對中, 對南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가 복합적으로 담겼다고 보는 것이 적함
- ▶ 최근 북한의 행보로 볼 때 ‘신고-검증-폐기’로 이어지는 미국식 비핵화 로드맵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충격 요법 차원의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방북 취소를 결정
 - ※ 8.17(金)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이 직접 ‘미국의 제재가 강도적이라 언급’하며, 사회주의 자력갱생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의 최고 장애요인이 중국이라 보고, 이번 방북 취소를 통해 사실상 對中 최후 통첩을 했다고 봐야 함
 - 즉, 최근 북중 접경에서 수산물 등 금수품이 거래되고, 중국의 화력 발전기 제공으로 평양의 전력난이 해소되는 등 중국이 대북 제재의 구멍이란 의심이 커지자 공개 경고를 한 것임
- ▶ 이와 함께, 현재 文정권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없는 남북관계 개선’이 국제적 대북 공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우회 경고한 것으로 보임

〈표1〉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의 북핵 관련 對中 발언

일시	계기	발언내용
5/17	나토 사무총장 면담	"김정은이 중국과 2번째 만남 뒤 상황이 달라진 것 같다."
5/23	한미정상회담	"시진핑과 2번의 만남 이후 김정은의 태도가 좀 바뀌었다. 나는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6/27	사우스캐롤라이나 연설	"중국은 그동안 우리를 도와 왔다. 하지만 중국이 더 이상 우리를 돕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애석한 일이다."
7/9	트위터	"중국은 對中 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북한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본다."
7/31	플로리다 연설	"중국이 북한문제에 끼어들어 방해하고 있다."
8/16	백악관 각료회의	"중국 때문에 미북간 비핵화 협상이 타격을 받고 있다."
8/20	로이터통신 인터뷰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은 과거처럼 우리를 돕지 않고 있다."
8/24	백악관, 트위터 폼페이오 방북취소	"對中 무역 관련 미국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중국이 이전과 같이 비핵화 절차를 동참하지 않고 있다."

2 美 의회 및 전문가 반응

- ◆ 美 의회는 비핵화 의도가 보이지 않는 북한에 대해 최대압박 캠페인을 지속해야 한다며, 이번 방북 취소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
 - ▶ 코리 가드너(공화당,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트럼프의 이번 취소 결정은 ‘옳은 일’이며, 비핵화 의도없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 최대 압박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
 - ▶ 에드워드 마키(민주당,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간사): “대북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관여와 압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최근 대북제재의 구멍이 커지고 있는 것은 중리의 김정은에 대한 조력 때문이다”고 지적
 - ▶ 짐 뱅크스(공화당, 하원 군사위 소속): “이번 결정을 통해 시진핑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 최선이라는 현실을 조속히 인식해야 하며, 김정은 역시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가 최선임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
 - ▶ 밥 메넨데즈(민주당, 상원 외교위 간사): “싱가포르 회담 이후 비핵화 상황은 북한의 핵활동이 전혀 중단되지 않았다는 IAEA 연례보고서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목표, 북한의 시간표 등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
- ◆ 美 전직 관리 및 전문가들은 방북 취소 이유를 ‘빈손 귀국’ 우려 때문이란 진단과 함께 협상 실패시 군사·경제·정보 등 전방위적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
 - ▶ 로버트 아이훈(前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 “북한으로부터 긍정적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의 방북은 또다시 ‘빈손 논란’에 휩싸일 것이며, 이는 국내정치적 수치를 불러올 것이다”고 전망
 - ▶ 에번스 리비어(前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 “북한이 이번 조치로 충격을 받고, 향후 비핵화 대화에 진지하게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대북정책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고 진단
 - ▶ 브루스 클링너(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비핵화 협상 교착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방북 취소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향후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대비한 압박 카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 ▶ 전성훈(前 청와대 안보전략 비서관): “이번 트럼프의 결정은 단순한 대북 압박을 넘어서는 향후 비핵화 프로세스의 구체적 로드맵까지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봐야 한다”고 평가

- ◆ 또 다른 원인으로 비핵화 협상의 세부 사안, 즉 비핵화와 종전 선언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란 견해도 다수
 - ▶ 제임스 도빈스(前 국무부 유럽 차관보): “미국은 북한에 핵보유 현황을 완전히 제공하라고 촉구 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종전선언 채택이 우선이란 입장이며,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북한의 주장에 경도되어 있다”고 분석
 - ▶ 패트릭 크로닌(신안보센터 아-태 안보소장): “김정은의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 주장과 트럼프 행정부의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입장이 정확히 충돌한 상황에서 이뤄진 방북 취소”로 평가

3 향후 파장 및 대책

- ① 북한의 향후 행보: 9.9절 행사에 집중할 전망
 - ▶ 현재 美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방북 취소의 직접적 배경은 김영철이 폼페이오에게 전달한 친서에 적시된 ‘평화협정 未추진시 비핵화 협상 무산 및 핵미사일 실험 재개 경고’ 때문이라고 보도
 - ※ 8.28(火) CNN은 북한이 미국에게 “평화협정 未추진 및 대북제재 해제 없이 비핵화를 고집한다면 핵 미사일 실험 재개를 경고했다”고 보도
 - ▶ 同 보도가 사실일 경우, 북한은 ‘비핵화 진전없이 대북제재 해제없다’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에 불만을 품고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동원해 타개하려는 것으로 판단
 - 즉, 지난 5월 트럼프의 미북 정상회담 취소 발언 직후 김계관이 저자세 담화 발표로 상황을 조기 수습했던 것과 달리, 이번은 치밀한 계산 아래 이뤄진 조치로 보임
 - ▶ 한편, 이번 조치에서 특징적인 것은 트럼프가 문제의 원인을 대부분 중국에게 돌리고 김정은에게는 긍정적 신호를 발신 중이므로, 북한 입장에서 미국의 즉각적 군사 공격 부담도 크지 않다는 게 대미 협상에서의 활용 요소
 - ▶ 이렇게 볼 때, 북한은 당분간 상황을 관망하며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에 대한 직접적 비난없이, 9.9절 행사 준비에 모든 전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
- ② 미중간 무역전쟁에 직접적 영향 불가피
 - ▶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승리를 확정짓고 중국이 북핵문제에서 손을 떼도록 하기 위함인데, 문제는 단기간 내에 미국이 중국의 백기투항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임
 - ▶ 현재 진행 중인 미중전쟁의 스코어는 △기축통화의 위력, △미중간 기술 격차, △유럽 및 일본의 미국 편들기, △중국의 대미 의존도 등으로 볼 때, 미국이 중국을 코너로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
 - ※ 최근 미국은 중국산 핵심 제품 500억 달러 상당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역시 미국산 농산물 등에 같은 액수의 보복을 단행

- ▶ 그러나 관건은 트럼프의 의도대로 중국이 더 버티지 못하고 북핵 문제를 미국에게 양보하면서 상황을 종료할지 아니면 시간을 좀더 끌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할 지는 아무도 모름
- ▶ 이렇게 볼 때, 이번 트럼프의 방북 취소 결정은 對中 공개 경고인 바, 만약 시진핑이 이를 무시하고 9.9절에 방북해 열병식을 참관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 가능성은 더 커질 전망
- 미국의 입장에선 시진핑의 9.9절 열병식 참관은 단순한 북중관계 과시를 넘어 군사협력의 본격화를 공개 선언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큼

③ <판문점 선언> 이행에 차질 발생 가능성

- ▶ 이번 결정으로 이미 일정 조율까지 마친 3차 남북정상회담과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식 등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결정으로 싱가포르 회담 이후 비핵화 진전없는 북한의 요구 증대에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이라, 우리 정부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 속도 및 대북제재 공조 간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상황
- ▶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협력의 대폭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서 과연 3차 남북 정상회담(평양)의 정상적 개최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
 - ※ 8.13(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리선권이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확대가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라며 정상적 이행을 강하게 촉구

④ 향후 남북관계 속도 조절과 국제공조 강화가 필요

- ▶ 핵심은 한미간 대북제재 공조가 무너질 경우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물론 남북관계의 진전 가능성도 함께 낮아지므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동시 추진이 필수
- ▶ 이와 함께, 최근 ‘북한産 석탄 밀반입’ 문제로 한국이 대북제재 공조의 구멍이란 국제적 불신과 함께 한미간 동맹관계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에 앞장 서야 함
- ▶ 무엇보다 남북 연락사무소 추진이나 교류협력 사업시 제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사소한 물자라도 의심의 소지가 있다면 유엔 대북제재위에 사전 통보 및 승인 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

III. 유튜브의 국내 통신망사용 문제점 및 개선안

작성: 김신의 연구원 ☎02-6288-0527

현재 국내 인터넷 통신망 사용량에서 유튜브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은 통신망 사용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연간 수백억 대를 지불하는 국내 IT기업과의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유튜브의 부가통신 사업자 지정, 과세기준 마련위한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 등이 시급함

1 국내 통신망사용 현황

◆ 인터넷 망 사용료¹⁾ 관련 현황

- ▶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 72%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유튜브)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업자들은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음
- ▶ 반면, 네이버, 아프리카TV 등 국내 콘텐츠 제공업자들은 국내 통신사에게 네트워크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
 - ※ 구글의 한국 전체 트래픽은 네이버의 6배 추정, SK브로드밴드의 페이스북 트래픽은 네이버의 5배로 밝혀짐

1) 망 사용료란,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네트워크 사업자에 내는 비용을 총칭. 캐시서버 설치비, 전용회선 운영비, 접속료 등이 포함됨.

[표1] 2016년 망 사용료 지급 현황²⁾

국내 콘텐츠사	지불액	해외 콘텐츠사	지불액
네이버	734억	구글(유튜브)	0원
카카오	350억	페이스북	0원
아프리카 TV	150억	넷플릭스	0원
넷마블·엔씨소프트 등 게임사	100억	텀블러	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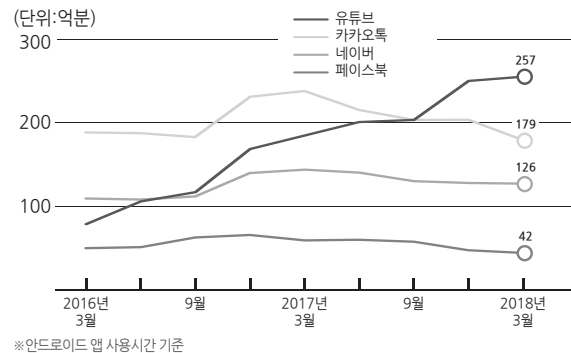
◆ 압도적 점유율의 유튜브

- ▶ 인터넷 트래픽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부문에서 구글(유튜브)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압도적임
 - 지난 6월 국내 데이터 트래픽(6458TB) 중 53.4%는 동영상 시청에 사용되며 이중 절반가량은 유튜브에서 소비됨. 국내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는 전체 이용시간의 58.4%를 유튜브에서 소비하고 있으며, 모바일 이용자의 88.8%가 유튜브 앱 설치³⁾
- ▶ 국내 모바일 동영상 이용시간 및 점유율(2018년 2월 기준) 파악 결과 유튜브가 총 257억 분을 기록, 전체 국내 모바일 동영상 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드러남

※ 국내 모바일 앱 사용 시간(안드로이드폰 기준, 2018년 2월)

모바일 앱	사용시간
유튜브(구글)	257억분
카카오톡	179억분
네이버	126억분
페이스북	42억분

증가하는 유튜브 사용시간



자료 : 와이즈앱

2) 정동훈, 「망중립성 논의의 쟁점과 함의」, 『정보화정책』 (제25권 제1호), 2018.
 3) 「2017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정책연구17-26』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2017.11

2 구글·페이스북의 '무임승차' 논란

- ◆ 수백억대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콘텐츠 사업자들과 달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계 콘텐츠사들은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내세워 망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
 - ▶ 현재 통신사들은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맞춰 통신망 투자 등 막대한 인프라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⁴⁾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대형화 및 급격한 성장으로 망 투자비용 분담 요구 등장
- ◆ 구글(유튜브)의 경우 2011년 한국에 서비스를 시작했던 초창기 협상 시, 국내 통신업체들이 자사 이용자들의 유튜브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무료 사용계약을 맺음. 이후 유튜브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협상력 상실된 상황
 -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유튜브 캐시서버⁵⁾를 자사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설치해주고, 트래픽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고 있음. KT는 아예 자체 비용으로 구글의 캐시서버를 자사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설치함
- ◆ 한편, 구글 및 넷플릭스는 자체 홈페이지에 '통신사 접속 속도 비교' 페이지를 만들어 전세계 통신사 별로 서비스의 전송 속도를 공개⁶⁾함으로써 이용자들을 볼모로 통신사 간의 속도 경쟁을 부추겨 자발적으로 캐시서버 용량을 증설하게 하는 무언의 압박을 가한다는 비판 존재

[참고사례] '구글세' 논란

구글은 2017년 국내에서 약 2조원의 천문학적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됨.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및 검색, 배너, 유튜브 등을 통한 광고 매출 등이 포함됨. 그러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음. 최근 유럽연합(EU)은 구글의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과징금 약 3조원을 부과 하는 등 전 세계에서 구글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구글세' 도입 논의가 활발함

4) NH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네트워크 사업자 유무선 인터넷망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하는 설비투자액(capex)은 2017년 5조8500억 규모, 4G LTE 구축한 2011년 이후 통신 3사의 연평균 설비투자 합계액은 6조8200억 원 규모, 5G 서비스를 위해 2018년엔 7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

5) 기업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자주 찾는 정보를 따로 모아두는 서버로,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별도로 캐시서버를 둘 경우 과부하 현상을 크게 저하시키며, 이용 속도도 늘리는 효과

6) 넷플릭스 통신사 접속 속도 비교 페이지 : <https://media.netflix.com/ko/company-blog/netflix-isp-speed-index-for-march-2018>

◆ 반면, 페이스북은 최근 적정 수준의 망 사용료 납부 계획을 밝힘

- ▶ 2016년까지 KT에 캐시서버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도 이를 통해 접속하게 하였으나 최근 광고 매출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등 현지 조세법 준수 방침 및 망 사용료 납부 계획⁷⁾을 밝힘

[참고사례] 페이스북 과징금 사례

- 2016년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에 캐시서버 무상 설치 시도 → 협상 실패, 국내 서버로 연동되어 있던 가입자들의 접속경로를 임의적으로 홍콩 서버로 변경 → 이용자들은 접속이 느려지거나 끊김 현상 등 불편을 겪음 → 방통위는 올해 3월21일 페이스북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3억 9600만 원을 부과 함 →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한 상태

3 해외 사례

◆ 프랑스 : 구글 vs. 프랑스텔레콤(FT)산하 Orange社

- ▶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개입하여 법정 소송 끝에 구글로부터 망 사용료를 지불 받음. 과도한 모바일 트래픽 유발에 대한 망 사용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하는데 합의한 것
- ▶ 구글 서비스 제공에 발생하는 트래픽에 비례해 망 사용료를 지불할 것에 합의함. 망 중립성 원칙을 고수해왔던 구글의 기존 원칙을 뒤집은 결정이란 점에서 주목⁸⁾

◆ 미국 : 넷플릭스 vs.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타임워너 케이블

- ▶ 넷플릭스는 자체망을 구축해 통신사와 직접 연동을 추진하면서 무정산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통신사는 대가 지급을 요구

7) 2018년 1월 10일 과기부 2차관과 페이스북의 케빈 마틴 부사장 면담을 통해 밝힘

8) 「Google의 프랑스 통신사 망 사용료 지불 사례를 통해 살펴본 망중립성 논쟁의 현주소」, 『동향과전망:방송·통신·전파』 (제59호), 2013.

- ▶ 분쟁 끝에 2014년 넷플릭스는 컴캐스트에 망 이용료 지급에 합의하였으며, 버라이즌(2014년 3월), AT&T(2014년 7월), 타임워너케이블(2014년 8월)과 차례로 망 사용료 지불에 합의함⁹⁾

4 시사점 및 향후과제

- ◆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방지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
 - ▶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쟁상황평가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구글(유튜브)의 부가통신사업자 지정 및 넷플릭스의 방송사업자 지정 필요
- ◆ 글로벌 기업의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입법 검토
 - ▶ 글로벌 기업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규제안¹⁰⁾ 반영된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 추진 필요
 - ▶ 과세기준 마련을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트래픽 관리 관련 입법 추진, 트래픽 기준 방송발전 기금 부과 방안 검토 필요
 - ▶ 고액의 조세회피 전략을 설계·자문한 로펌, 회계 법인이 자문내용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 신고제도’ 도입¹¹⁾ 필요
 - ※ 관련법안 발의 현황
 - ▷ ‘글로벌 기업 대리인 지정 의무화’법안 - 김성태(비례)의원
 - 국내 이용자에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 대상 국내법 준수 및 관련사항 처리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 국외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등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 방통위 이용자 보호 평가자료 제출의무 부여
 - 방통위의 사실조사 권한 부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등에 국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납부 의무화 등
 - ▷ ‘뉴노멀법’- 김성태(비례)의원
 - 경쟁상황평가 대상 확대, 회계정리 및 통계보고 의무 강화 등을 통해 대형 포털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추진
 - 국내 또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명문화 등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 글로벌 사업자의 ‘지정대리인제도’도입 통한 국내법 적용
 - 구글, 텀블러 등 부가통신 사업자에 혐오·차별 표현 모니터링

9) 정동훈(2018)

10) OECD는 다국적기업이 각국의 조세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실제 유효세율을 대폭 낮추는 행위를 관련국가의 세원을 잠식(Base Erosion)하고 과세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시키는 행위(Profit Shifting)라고 규정(BEPS)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BEPS 방지 프로젝트 관련 입법과제’, NARS현안분석(vol.12.), 2018.7.

11) 안종석·구자은·정경화, 「금융상품 과세자료 사전확보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

IV. 외국인 근로자 130만 시대, 현황과 대책

작성: 김영현 연구원 ☎02-6288-0532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02-6288-0531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130만명 시대에 돌입했으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불법체류자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외국인 불법 체류자 급증 원인은 무사증·관광비자 등을 통한 취업형 불법 체류자 증가, 고용허가제 폐해, 외국인 고용을 선호하는 사업주들의 행태 등으로 보여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농어업 및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비율이 늘면서 외화 유출 등 부정적 효과가 큰 상황.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내국인 근로자 역차별 해소 위한 불법 체류 단속 강화,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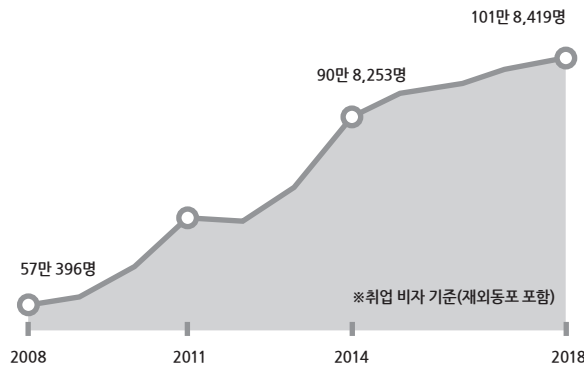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급증 원인

■ 외국인 근로자 수 증가와 더불어 급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수 130만명 시대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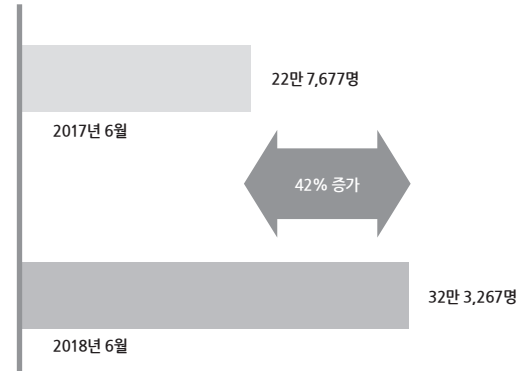
- ▶ 올해 6월말 기준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동포 비자 포함)는 101만 8,419명이며, 10년 전에 비해 두배 가까이 급증
- ▶ 불법 체류자는 6월 말 기준 32만 3,267명으로 작년 6월의 22만7,677명 대비 42% 급증
- ▶ 불법 체류자 32만명을 추가하면 현재 전체 외국인 근로자는 130만여명

외국인 근로자 수 증가 현황



출처 : 법무부 · 관련 통계(재정리)

지난 1년간 불법 체류자 증가 현황



*2017년 7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출처 : 법무부(재정리)

◆ 최저임금 인상 발표 1년 만에 불법 체류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가 13만명 급증

- ▶ 정부의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 이후 작년 하반기에만 불법 체류자가 2만3,000여명이 증가
- ▶ 실제 최저임금 적용이 시작된 올 상반기의 경우 7만 2,000여명이 증가하여 그 폭이 확대
※ 주로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많이 고용

■ 외국인 불법 체류자 급증 원인

- ◆ 대부분의 불법 체류자는 한국에서의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文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도 불법체류 근로자 증가 원인의 개연성이 높음
 - ▶ 입국목적 자체가 불법 체류인 경우는 브로커 연결 가능성 추정
 - ▶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불법 체류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
 - 불법 체류자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과 자국 간 임금 차이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경향
- ◆ 무사증 및 관광비자, 단기 체류 비자, 난민 문제
 - ▶ 정부의 무사증(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제도) 정책이 확대되고, 관광정책에 따라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는 추세
 -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불법 체류자 25만1,041명 중 절반이 넘는 14만1527명은 사증면제(무사증)와 단기방문비자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게 된 것으로 확인(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6.29)

- ▶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을 한정해 1개월 무비자 제도 운영
 - 제주도의 중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현재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난민 신청자도 올해 총 1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외국인 근로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 한국에 거주하는 10만여명의 태국인 중 5만명 가량은 불법 체류자(주한태국대사 외신 보도)
- ◆ 고용허가제 폐해
 - ▶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조건 충족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회사 폐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주 허락이 없으면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
 - 변경 가능한 사유가 있더라도 3개월 이내 허가된 분야로 취업하지 못하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함
 - ▶ 법무부는 2018년까지 불법체류율을 10%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 합동단속을 연간 20주 실시하겠다고 밝힘
 - 고용허가제를 보완하지 않은 강압적 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양성하는 부정적 효과 초래
-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선호도 상승
 - ▶ 간병인, 모텔 청소원 등 내국인 기피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의 충원이 빈번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통해 최저임금제 등 관련 제도의 편법 적용이 가능해짐
 - ▶ 건설근로자의 경우, 장년층의 내국인들은 젊은층 외국인에게 구직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
 - 국내 건설업 근로자 168만명 중 27만5,000명(2016년 기준)은 외국인 근로자로 추산(한국산업인력공단)
 - 은평구·강동구·영등포구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불법 외국인 근로자 추방 집회 수차례

2 외국인 근로자 수 급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 최저임금 시행 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농가 및 중소기업 직격탄
 - ▶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시간당7,530원)이 적용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전국 농가는 659억 2,800원의 추가 임금 부담(농협중앙회·관련 자료, 2017)
 - 농가소득은 하락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농가는 이중고에 시달림
 - 농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외화 유출을 부추기는 실정
 - ※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의 개정안 발의(엄용수 의원,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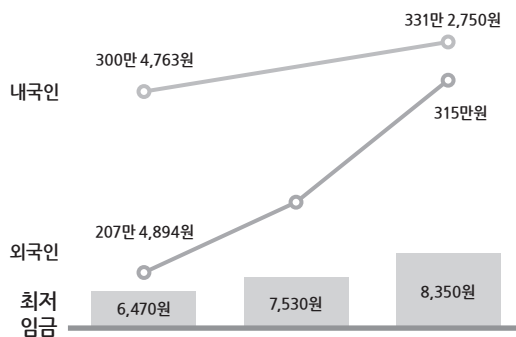
최저임금 인상 시 농가 인건비 추가 부담(추정치)

연도	최저임금(원)	1개월 임금(원)	외국인 근로자 수(명)	연간 임금 수준(원)	증가분(원)
2017	6,470	135만 2,230	2만 4,799	4024억 700만	-
2018	7,530	157만 3,770	2만 4,799	4683억 3,500만	659억 2,800만
2019	8,765	183만 1,885	2만 4,799	5451억 4,700만	768억 1,200만
2020	10,202	213만 2,218	2만 4,799	6345억 2,200만	893억 7,500만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7년 연말 추정치
출처 : 농협중앙회 · 관련 자료(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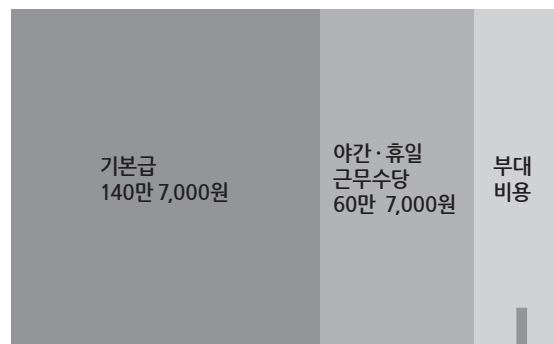
- ▶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단순노무직 제조업 26만9,000명) 인건비는 1조752억원 증가(중소기업중앙회, 2017, 최저임금 시간당7,530원 적용)
- ▶ 중소 제조업에서 작년 내국인(월 300만원)과 외국인(207만원) 간 월급 차이는 93만원 정도에서 올해 75만원으로 감소
 - 제조업에서 최저임금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외국인 간 임금 격차는 감소 추세
 -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을 적용을 위해 내국인 근로자들 임금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하는 실정

수도권 중소 제조업체 A사 월평균 급여



※ 외국인이기는 추가로 숙박과 매일 3끼 제공(약 60~70만원 상당)
- 전체 직원 수 45명(내국인 30명, 외국인 15명)
- 내국인 근로자는 전원 10년 이상 숙련공(최저임금 미대상자), 외국인 근로자는 전원 최저임금 적용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



※ 추가로 숙박비 지원 등 부대비용은 평균 38만 4,000원, 2017년도 최저임금 기준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17년 외국인력 고용 실태조사' (재정리)

- ◆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송금액 증가로 인해 외화 유출 확대
 - ▶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송금자 비율 93%, 1인당 월평균 송금액 107만1,000원(이민정책연구원, 2015)
 -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이상으로 볼 때 이들의 송금액은 연간 1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고용정보원, 2017)
 -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외 송금액으로 58억 달러(약 6조8,600억원) 발표(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5)
 -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연간 본국 송금액은 10조원 규모에서 15조원 대로 확대될 가능성 큼
 - ▶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소비 기여도가 낮고 오히려 본국으로 송금이 확대되어 文정부가 언급한 최저임금의 내수진작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
 -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될 것임

3 외국인 근로자 관련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해외사례

- ◆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주요 선진국 중 업종·연령·지역에 따라 同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 차등 적용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있어서도 유연한 적용이 가능

업종·연령·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국가

국가	차등 적용 내용
일본	-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 결정 -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별도 최저임금 기준 적용
미국	- 정부가 연방최저임금을 결정, 주별 연방최저임금 이상의 최저임금 결정 - 어업 종사자, 농장 근로자, 운전기사, 신문배달원 등 일부 업종은 적용 제외
캐나다	- 연방최저임금제는 없는 대신, 주별로 최저임금 결정 - 건축가, 법률가, 엔지니어, 회계사, 교사, 개업의, 농·어부 등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적용 예외
영국	- 기술·경험 부족에 따른 생산성 차이로 미성년자와 성인 간 차등 적용

출처: 매일경제·관련 자료(재정리)

- ◆ 외국인 근로자 채용 문제에 대해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철저히 실리적인 목적에 따라 접근
 - ▶ 숙련 기술자에게는 국내 유치를 위해 내국인과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지만 비숙련 노동자에 대해서는 자국민 일자리 보호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다수

외국인 임금 차등지급 사례

국가	임금 결정	월급 수준
일본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나 1년 연수기간에는 최저임금 미적용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국적에 따라 임금 적용	60만원 선
홍콩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한해 정부가 임금 결정	70만원 선

출처 : 매일경제 (재정리)

■ 일본

- ◆ 일본 정부는 1993년부터 외국인기능실습제도를 통해 외국인 실습생을 수용
 - ▶ 외국인 실습생 제도의 명분은 외국인들에게 일본 산업의 노하우를 제공해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활용
 -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만 1년 연수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음
- ◆ 일본 내 불법 체류자 수는 66,498명으로 지난해보다 1,228명(1.9%)으로 소폭 증가(2018.1.1.기준)
 - ▶ 한국과 비교해 1/5 수준으로 불법체류율은 2%에도 미치지 않음
 - 취업형 ‘위장 난민’까지 증가하고 있지만 예비심사에서 난민여부가 모호할 경우, 임시로 6개월의 취업을 허가한 이후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체류 불가, 취업 불가능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
 - ▶ 불법 체류자들이 내국인의 저임금 일자리 시장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내수 인력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싱가포르

- ◆ 싱가포르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 간 임금 차등 지급을 허용
 - ▶ 싱가포르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CNN 보도)
 - 작년 6월 기준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137만4,900명이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는 29만6,700명에 달했음
 - 싱가포르 인구가 56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인구의 1/4을 차지하는 셈
- ◆ 육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적극 활용
 - ▶ 임금 수준이 낮은 저개발 국가 외국인의 자국 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
- ◆ 다만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 간 임금 불평등이 사회 문제화되기도 함
 - ▶ 싱가포르 내국인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3,077달러인 데 반해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인도, 방글라데시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400~465달러에 그침(도이체방크)

■ 그 외 국가

- ◆ 홍콩은 '최저임금법령'의 적용 대상에 이주 가사노동자가 포함되지 않음
 - ▶ 대신 홍콩 정부는 이주 가사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음
 - 최저임금은 홍콩의 전반적인 경기 상황과 노동시장, 임금 수준, 물가 변동 등 경제지표를 참고해 결정하며 내국인의 표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
 - ※ 말레이시아는 이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음
- ◆ 캐나다 정부는 2012년 4월 고용주가 외국인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평균 15% 적게 지급하는 것을 허용

4 시사점

- ◆ 최저임금 급속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
 - ▶ 농어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과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으므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통해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
 -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들 또한 업종이나 기업의 생산규모, 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중임

- ▶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거나, 내국인 임금 인상을 막는 역설적 상황이며 숙식 제공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보다 비용 부담이 큼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¹⁾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습기간을 별도로 적용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 검토
※ 최저임금 사업을 종류·규모·지역별로 구분해 의무 적용,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박대출 의원, 8.23)
-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의 비용 부담 급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국인·외국인 근로자 간 임금 차등을 두는 특단의 조치 검토 필요
·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집중되면 당초 의도했던 '경제활성화' 보다는 외화 유출 등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질 것임
- ◆ 내국인 근로자 역차별 해소 및 법치확립을 위한 불법 체류 단속 강화
 - ▶ 불법 체류자 신고포상제 도입, 콜센터 운영 등 불법 체류자를 적극적으로 단속
※ 일본의 경우 불법 체류자를 신고할 때 5만엔 이하의 보상금 지원
 - ▶ 불법 체류자 고용사업장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미지급 임금의 추가 부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업주의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
※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과 별개로,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대법원 판시)
- ◆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정비·보완 시급
 - ▶ 취업형 불법체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사증 및 관광비자, 단기체류 비자 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
· 일본과 같이, 취업형 난민의 불법 체류자 전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가 요구됨
 - ▶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고용허가 조건, 시장 상황 등에 맞춰 개선함으로써 불법체류자 양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함

1)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예보 실태 조사', 8.20)



이슈브리프 ISSUE BRIEF (IB 2018-17)

편집위원회 위원장 : 이종인 편집위원 : 김원표·이윤식 간사 : 김영현·김신의

발행처 : 여의도연구원 TEL : 02.6288.0502 Website : www.ydi.or.kr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4층

발행일 : 2018년 8월 30일 디자인 · 인쇄 : 원기획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